

IT기업에 대한 정부의 R & D 지원 개선 방안

송학현^{*} · 최세하^{**} · 강희조^{***} · 김윤호^{***}

*정보통신연구 진홍원, **정보통신기능대학, ***목원대학교 IT 공학부

Goverment Strategy for Improvement of R&D Support to the IT Enterprises

Hag-hyun Song^{*} · Se-ha Choi^{**} · Hee-jo Kang^{***} · Yoon-ho Kim^{***}

e-mail:hhsong@iita.re.kr

요 약

우리나라 IT 기업은 98년 10,000여개였으나 2001년에는 20,000여개 업체로 4년만에 2배의 솟적인 증가를 보였고, 종사자수는 98년 38.7만여명에서 2001년에는 49.4만여명으로 평균 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 IT산업의 생산 및 GDP 비중은 98년 88.1조원 9.3%에서 2001년 150.5조원 12.9%로 증가하였고, IT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방식과 간접적인 인력양성지원, 기반환경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기업에 대한 정부출연사업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시장원리와는 무관하게 일종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의 지원 내용과 지원방법 등을 살펴보고 그 개선점을 고찰한다.

ABSTRACT

In 1998, Korea IT company operation 10,000 and Gross Domestic Product(GDP) was 9.3%, IT industry employee 380,000 persons. In 2001, growing the company 20,000, GDP 12.9% and 500,000 employee. National policy have diverse programs to the IT sector. Ministry of communication(MOC or MIC) have invested by the R & D Program from later 1980'. National subsidizes direct or indirect to the programs. it's not market principal but subsidized to organization(Institute, college, company etc), this paper analysis the national subsidize system and suggestion the advanced system

I. 서 론

정부가 각종 R&D를 유도하고, 인력을 육성하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가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9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 IT산업과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이 우리 경제성장의 양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등 후발국의 부상과 노령화의 급속한 진행 등에 따라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BT나 NT 등 차세대 성장기술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IT는 모든 기술의 기초·기반기술이며 전통 산업의 IT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IT산업은 향후에도 30년 이상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할 전망으로 IT, BT, NT, ET, CT 등의 5대 차세대 성장산업 중 IT 비중은 2010년 7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IT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기술 및 산업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IT분야에서도 중국 등에 추월 당할 우려가 높은데 이는 중국이 '시장과 技術을

교환'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IT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IT기술 진화에 따라 S/W와 디지털콘텐츠 등 IT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의 관련 산업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IT 핵심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IT 신산업 육성 등에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일류 IT산업을 육성함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불확실한 미래의 도전에 대해 응전하여야 한다. [1]

표 1-1. 2005년까지 분야별 성장전망

(단위 : %)

성 장 울	전세계	주요 선진국		
		미국	유럽	일본
하드웨어	5.5	3.2	6.1	5.7
소프트웨어	13.8	12.2	15.0	21.2
IT서비스	15.6	15.5	13.5	11.6
전체	12.0	11.3	10.1	7.3

IT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World Best/World First 기술만이 생존하고 있는데 IT 산업의 글로벌화로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의 양분 개념이 사라지고 국내시장이 세계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경쟁이 심화되어 상용화기술 개발 후 내수시장 우선 확보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여 선진기술 모방전략(Catch-up) 보다는 미래 기술흐름을 이해하고 기회를 선점(Leading Technology)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기술수명주기(Life Cycle)가 급격히 단축되고 R&D투자의 위험성이 증대하여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미래 기술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집중 지원하여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위험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각 국에서도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경주하여 미국에서는 네트워킹, 컴퓨팅 등의 인프라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로 유지하면서 이를 국방, 의료 등 핵심 융·용·분야에서 목적 지향적인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중이고 일본은 모바일 기술, 인터넷기술, 광 네트워크, 정보보호 등 차세대기술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기술개발에는 Timing이 중요한데 선진기술 모방(Catch up) 단계에서는 기술수준이 낮아도 ① 저가생산 또는 ② 국내시장 보호정책을 통해 초기 시장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IT 산업이 급 성장하고 기술의 Life Cycle이 급속히 단축됨에 따라 이제는 기술 수준과 가격 양면에서 모두 경쟁력 있는 기술을 적기에 개발하여 양산해야만 성공 가능하여 통신사업자, 장비제조업체 등 민간의 기술 수요를 적극적으로 기술기획 과정에 반영하는 한편, 기술개발 과정에서도 기술수요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즉시 제품화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미래 성장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IT 기술은 타 신기술(5T) 발전의 기반 기술로서 상호 선순환 발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시장형성 초기 또는 실용화 전 단계에 있는 신기술(5T)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IT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 전제조건이다. [2][3][4]

II. 국내 IT산업 현황

우리나라 IT산업의 GDP 비중이 1997년 8.6%에서 2002년 14.9%로 급속히 증가하는 등 IT산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지난 5년간 실질GDP 증가분의 40%를 정보통신부문에서 창출한 것으로 IT산업의 수출비중은 1997년 23.0%에서 2002년 28.6%로 증가하였으며, 수지혹자는 지난 5년간 682억불(전체 무역수지 흑자 950억불의 71.8%)에 이르고 있다. 2002년 11월 이후 휴대폰을 포함한 무선통신기기가 자동차와 반도체를 제치고 월간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IT직업 종사자수는 1997년 101만명에서 2002년 121만명으로 증가하여, 취업자 증가율은 전 산업의 0.9%보다 4배 이상 높은 3.7%를 기록하고 있고, IT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997년 4억 달러에서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1년에 50억 달러를 기록(1997년 5.7%→2001년 42%)하고 있다. IT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기술개발에 부쳐간, 분야간 중복문제가 존재하고, 공공IT R&D 대부분이 국책연구소 위주(ETRI 75%)로 이루어지는 등 연계와 통합을 통한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가 미흡한 실정이다. 단기 상용화 기술개발에 치중하여 핵심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술 및 가격 양면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 산업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기술료 지출 및 핵심부품 수입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국내 CDMA단말기 수출은 2002년까지 122억불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대수 기준으로는 총 1억 2,000만대를 돌파하였고 반면, 동 기간 중 국내업체들은 총 12억 7천만불 규모의 기술료를 퀄컴에 지불하였으며 핵심 부품은 34억 4천만불 규모를 수입하였다.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은 기초연구, 연구소는 응용연구, 산업체는 개발연구가 각각의 영역을 특화하면서도 유기적인 연계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나, 최근 3년간 산학연 공동연구 과제비중은 평균 72%에 달하지만 실제 산업체 및 대학에 지원된 금액은 연구비의 14% 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IT 인력양성 측면에서 IT산업이 발전하면서 IT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S/W 분야 등 IT 인력 공급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한편, 기업의 요구와 배출인력간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 등으로 적시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총 정원규제 및 대학 내부당사자들의 첨예한 이해대립 등으로 인해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는 인력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인위적 장벽,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해 서열이 고착화되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유인이 감소되고 대학이 갖고 있는 보수적인 성향과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으로 정원이나 커리큘럼이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있지 못하며 IT기업 역시 전공자 보다 일류대학 비전공자 등 잠재성을 중시하는 채용관행을 보여 대학 등에 시장의 정확한 수요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R&D사업이 산학연 협력에 의한 인력양성과 연계되지 않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박사급 연구인력의 76.8%가 집중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S/W와 디지털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IT벤처기업을 육성해 왔으나 IT서비스 산업이 취약하고 벤처기업 역할도 아직 미미하고 IT기기 제조업이 전체 생산액의 70%, 수출액의 99.5%를 차지하여 반도체 등 3대품목의 수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나, 새로운 주력상품의 발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으로 반도체, 휴대전화, TFT-LCD 등 3대품목 점유비는 2002년 말 현재 65.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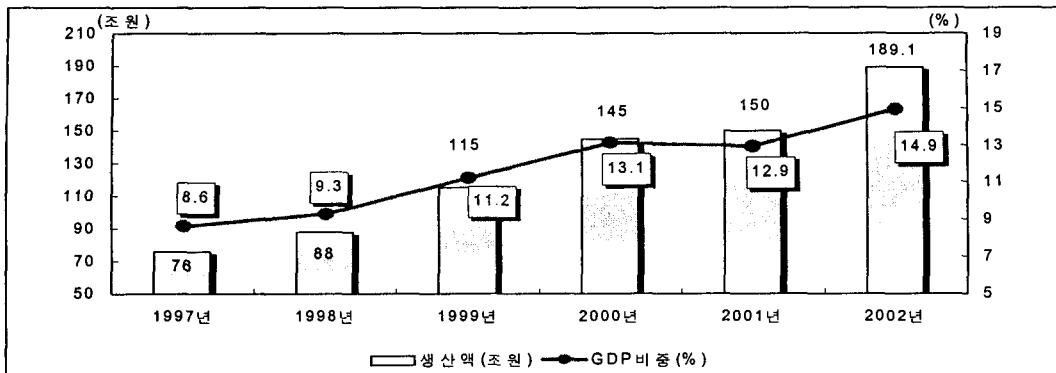


그림 1. IT산업 생산액 및 GDP추이('97~'02)

III. 새로운 IT산업육성 전략

정부에서는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커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IT신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인터넷 장비분야는 IPv6 인터넷을 조기 구축하여 라우터 등의 경쟁력을 높여 인터넷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무선 통합의 차세대인터넷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시범망(KOREAv6)을 구성하여 IPv6 기반 응용서비스를 조기 보급해야 한다.

표 3-1. IT분야 유망 신산업

분야	유망 신산업
■ IT 서비스	o S/W, 디지털콘텐츠, SI, 흠파일서비스(HDS)
■ 차세대 네트워크	o 이동통신장비, 디지털방송, IPv6, Post PC
■ 핵심 부품	o 반도체(System on Chip), 디스플레이

S/W, SI, 디지털콘텐츠 등 IT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임베디드 SW,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집중 육성하기 위해 임베디드 S/W기술센터를 설립하여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PDA·DTV등의 고 기능화를 지원하며 긴급구조(112, 119), 재난관리, 교통 등 공공 부문에서 LBS 사업을 시행하여 내수시장을 창출해야한다. 시스템통합(SI)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IT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eKOREA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SI분야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컴퓨터그래픽스(CG) 기반의 첨단 디지털 영상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마케팅, 공동제작시설 등을 갖춘 첨단집적지를 조성하며 디지털콘텐츠 투자펀드를 조성(2007년까지 약 2,000억 원)하고, 무선망 개방확대,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한다. 인터넷 장비(IPv6) 등 IT 네트워크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이동통신분야는 4세대 이동통신의 초기단계 기술로서 휴대인터넷 기술의 조기 개발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켜 시장을 선점하고 한·중·일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제 표준화에 대응해야 한다.

단말분야는 흠파일서비스 보급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PC 중심에서 PDA 등 차세대 단말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PDA 등 Post PC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지급 혜택 및 공공부문 시장확대를 추진하고, 지능형 오감정보처리 기술, 음성인식 등 기술개발을 확대해야한다. 디지털TV는 아날로그 TV시장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시장에 국내업체들의 진입을 지원하고 3대 주요 방송매체의 디지털화 조기 정착 및 고품질의 음성·영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멀티미디어(DMB) 방송의 조기 도입을 추진해야한다.

IT SoC 등 핵심부품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IT SoC 캠퍼스를 설립하여 SoC에 특화된 대학과 연계하여 석·박사급 고급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2006년 이후 매년 250명 이상의 고급설계인력, 1,000여명의 실무인력을 양성하여 연구소, 대학, 업계, SoC 캠퍼스가 공동으로 중장기 선도성 R&D 수행을 통해 SoC 분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위주인 IT SoC 설계업체와 파운드리(제조) 및 시스템업체의 연계를 지원하여 제조 및 수요기반 확보한다. IT SoC 지원센터를 IT SoC 캠퍼스에 통합하여 SoC 설계, 칩제작, 테스트에서 판매에 이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IT분야의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기 위해 기술발전 전망과 우리의 역량을 토대로 장기 기술로드맵을 작성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World-First/Best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2002년 마련한 IT 기술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요소기술을 기술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향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각종 시설기자재 지원에 대한 매칭펀드의 부담률(50%)을 완화한다. 기술간 융합 현상에 대응하여 대학, 출연연구소 중심의 학제간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산학연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SoC 캠퍼스 등 IT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학-산업체간 연구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통해 산업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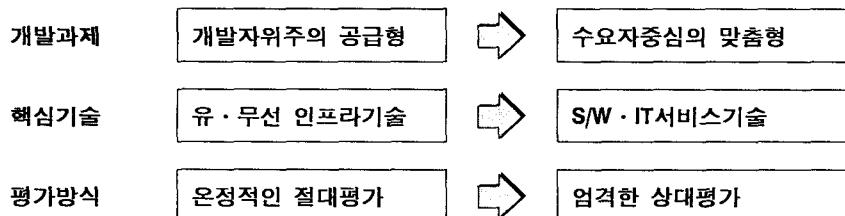
표 3-2. 2003년 분야별 기술개발 전략과제

분야	2003년도 전략 기술개발 과제
디지털 리라이프 촉진	■ Embedded S/W,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5개 과제
초고속인프라 고도화	■ 초고속 광가입지망, 4세대 이동통신 등 6개 과제
정보의 신뢰성 향상	■ IPv6기반 정보보호기술 등 2개 과제
D-TV 경쟁력 강화	■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2개 과제
미래 성장동력 배양	■ 초고집적(50nm) 회로설계 등 5개 과제

기술개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IT수요 확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S/W, 서비스 기술개발을 위한 전체 투자비중을 2002년 27%에서 2007년 50%로 확대해야 한다. 기술개발 전 과정에 대한 책임관리시스템(PM)을 도입하고, 연구성과가 낮은 하위 20% 과제는 전자평가 및 상대평가를 통해 조기 중단 해야 한다. 선진기업의 1/5수준인 정부 IT R&D 투자 규모 1.2조원을 2007년까지 2조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기술혁신체계를 개선하여 연구개발 수행주체, 기간, 예산규모 등을 특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을 세분화하여 대학, 기업 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6]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IT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200명 이상의 IT 산업체, 연구개发 등의 전문가들을 교수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IT/비IT 학과가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교과과정을 개편할 경우 교육 시설·장비 지원(2002년, 70개교(IT 38개, 비IT 32개) 지원)하며, IT전문교육 지원 대상을 실업자, 미취업자에서 대학의 학점인정 교육까지 확대하고, 2002년부터 시작된 IT 인턴쉽 지원을 확대한다. 1만명의 핵심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국내 IT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 우수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선진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해야 한다.

표 3-3. 기술개발 전략의 변화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과제기획과정에 민간기업, 대학 등 기술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지원 수행과제의 매칭펀드제를 개선하여 중장기적인 기초·원천 개발과제는 민간기업의 현금출연 의무를 폐지해야한다.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IT연구센터 등 연구 인프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민간펀드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우수 인재의 확보를 지원한다. 적정수준의 간접연구비(Overhead)를 반영하는 한편,

국내 대학이 세계 20위권 이내 우수 대학과 협력하는 경우 교육 및 연구장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교육부의 관련 입법동향 등에 보조를 맞추어 IT 관련 해외 우수대학의 국내 분교설립, 해외 우수 연구기관 등의 국내 유치를 추진하며 해외 우수대학의 IT관련 석·박사학위 취득을 지원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위적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수도권 대학 총 정원제한 완화를 추진하여 IT 학과 정원확대 및 대학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표 3-4. 아시아 주요국의 해외교육기관 협력 사례

홍콩	· 홍콩과기대 :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 외국인 교수 비중 90%로 아시아의 MIT로 부상
싱가포르	· 국립 싱가포르대는 미국 MIT, 조지아공대, 펜실베니아대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싱가포르 정부가 1억불 지원)
일본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고베분교(1991년 설립)
인도	· 와튼, 켈로그, INSEAD 등 세계 Top Business School 교수를 초빙하여 강의하는 ISB(Indian School of Business) 설립

IT벤처기업 창업활성화와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벤처확인제도와 같은 인위적 정책은 조기 종료하고, 시장 친화적 창업 기반강화에 주력하며, 시장 매개체에 의해 벤처기업이 성장하도록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보다는 간접 지원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IT투자규약의 선진화, 응자사업의 민간위탁 및 기술담보대출을 확대해야 한다.

기술력 있는 IT기업들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확대를 지원하여 국책연구소 수행과제 중 시장창출 효과가 특히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벤처기업과 국책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상용기술을 개발토록 하고 1억불 규모의 Korea Global IT Fund와 해외IT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기술력 있는 IT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4][5][7]

참고문헌

- [1] 2003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 기본계획 정보통신부 2002.6
- [2] 2003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 시행계획 정보통신부 2002.12
- [3]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의 평가와 전략 정보통신부 2002. 11
- [4] 중장기 IT기술 발전전략 정보통신부 2002.9
- [5]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의 정책방향분석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제 6권 3호
- [6] 국책과제 전자평가시스템 도입방안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제 6권 7호
- [7] Technology-Project map(1993-200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2. 7
- [8] 정보통신연구진흥원홈페이지
<http://www.iita.re.kr/>

IV. 결 론

WTO체제의 정착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주도의 산업육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IT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을 벤치마킹 할 선진국 모델도 존재하지 않아 정책수립 및 집행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IT리더쉽을 바탕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육성을 추진하되, 공공분야 구매자로서의 역할, 법제도 정비 등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IT산업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은 IT인프라와 제조업 기반을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를 조기 도입하여, 기업들이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로 진출토록 지원하고 IT수요인 정보화, 통신·방송서비스와 공급인 R&D와 산업의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며 IT제조업체와 통신서비스 업체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유도하고, 정부 기술개발계획 수립시 제조 및 서비스업체 등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